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노 동 일 | 경북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여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미국 하버드대학 교환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대한정치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국제대학원장 및 정책정보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 경북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한국의 지방정치와 지역사회 발전」, 「정치학 방법론」 등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고, "한국 정치발전의 제약요인 분석", "현대 한국사회의 권력구조 연구", "한국 정치학의 패러다임 모색" 등 다수가 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새 정부의 대학정책 기본방향을 보면, 크게 대학자율화의 제도적 보장과 교육 ·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대학의 자율화 및 책무성 강화, 국립대 법인화 및 재정회계제도 도입, 포뮬러 펀딩 방식에 의한 우수인력 양성 교육역량 강화사업,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종국적으로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연결된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모체라 할 것이다. 특히, 지식과 정보가 국가 부의 원천인 오늘날의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대학경쟁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정부나 대학 모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심각할 정도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07년도 The Times 평가 100위 권 대학 내에 우리나라는 단 한 개의 대학만 포함된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다섯 개의 대학이 포함된 것이 단적인 예라 하겠다. 새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대학정책들 역시 이러한 심각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과연 새 정부가 이번에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대학정책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자율화 정책을 제외하고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대학자율화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8. 5. 2일자로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며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현행규정을 2009. 1. 1자로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단과대학 수를 제한했던 현행 국립대학설치령도 철폐하여 내년 1. 1일 부터 시

행하겠고 입법예고를 하는 등 그간 대학들이 요구해 온 대학자율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학입시도 단계적으로 자율화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자율화 정책은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대학 정책의 경우는 수정보완 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교과부가 이번에 내어 놓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을 보면 세출부분의 대학재정에 대해서는 대학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세입부분을 보면 정부의 대학경쟁력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다. 국·공립대는 특히 재정을 정부에 대부분 의존한다. 재정의 안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대학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정부로부터의 안정적인 재정확보 문제다.

재정회계법시안은 그 내용에 있어 대학의 책임경영을 제한하고 있는 요소가 많아 이에 대한 수정 또한 불가피하다. 재정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법령에서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여 대학의 실정에 익숙하지 못한 외부인사들의 영향이 크게 미치게 함으로써 자칫 대학의 운영이 파행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특히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총장의 책임경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포뮬러 펀딩 방식에 의한 우수인력 양성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예산의 사용처를 대학 총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배분방식은 대학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방식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국립대와 사립대, 지방의 사립대와 수도권의 사립대의 배분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그 바탕위에 포뮬러 방식에 의한 경쟁력을 기준으로 대학에 지급될 재정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배분방식은 학생 수에 의한 균형배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대학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시안대로라면 수도권의 소수 대학 위주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를 제고시키려면 국내 대학에 잠재되어 있는 우수한 연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현재의 시안과 같이 해외학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이와 병행하여 국내의 우수한 유망 연구진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정부의 대학을 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우쳐 있으며, 국립대학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역사적으로 국립대학은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 못지않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나 기초학문분야 육성, 투자 소요가 막대하여 사립대학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 등은 국립대학이 맡아야 하며, 그것이 또한 국립대학의 주요 역할이기도 하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도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학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교육은 결코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점과 국립대학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